전남경찰, 수사권 조정 후 첫 영장 청구 받아냈다

가짜 주식사이트 피의자들 두차례 영장 신청, 검사가 청구 않자

광주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요청…'핵심 1명 청구 적정' 의결

경찰이 두 차례나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자 광주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데 따라 전국 고검에 영장심의의원회가 설치된 이후,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경찰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경찰청은 조만간 장흥지청에 해당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고검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영장심의위)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고 전남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 '영장 청구 적정'이라는 의견을 출석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전국 고검에 설치된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요청으로 영장 청구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지난 1월 설치됐다.

앞서, 전남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짜 주식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8명을 검거해 범죄 가담 정도를 고려한 끝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장흥지청에 신청했다. 장흥지청 담당검사는 그러나 별도의 보완수사 요구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남청 사이버수사대는 범죄 혐의·피해 규모 등을 감안, 일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고 이마저도 기각됐다.

경찰은 이에 반발, 광주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공식 요청했고 최종적으로 위원회로부터 핵심 피의자 1명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아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전국 고검에서 지금껏 2차례 열렸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지난 6월 서울고검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해 한 차례 열렸고 전남청이 두번째로 신청했었다.

당시 경찰청은 지난 6월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사가 별다른 보완수사 요구 없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자 영장 불청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 심의를 공식 요청했고, 심의위는 '검찰의 영장 불청구가 적정하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달리 광주고검 심의위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수사상 필요한 절차로 판단, 전국에서 최초로 경찰 요청을 받아들여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0명의 심의위원들은 경찰·검사가 제출한 의견서 등을 토대로 경찰 측 입장에 무게를 실어줬다.

심의위 결과에 대한 강제성은 없지만 심의위 규칙(25조)이 '담당 검사와 경찰은 심의위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남청 입장대로 장흥지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전남청도 장흥지청에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남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짜 주식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8명을 검거한 것과 관련, 체포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일부 피의자들의 고발장이 의정부지검에 접수된 데 따라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피의자 직접 면담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검 시행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한 피의자를 직접 면담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따지는 제도를 도입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검찰의 사법 통제관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부터 '피의자 직접 면담제' 시행에 들어갔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기록에 근거해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피의자를 불러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기로 했다. 질병 등의 이유로 직접 출석이 어려운 피의자는 전화나 화상 면담으로 대신한다.

피의자 면담 시 변호인의 참여권과 의견 진술권도 보장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도 이 같은 사실을 공문으로 통지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관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연합뉴스

물놀이 사망사고 '주의'

여수 수영장서 3세 남아·순천 댐 인근서 50대 잇따라 숨져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3세 남아가 물에 빠져 숨지는 등 주말 무더위와 폭염이 이어지면서 사고가 잇따랐다.

1일 여수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여수시 돌산읍 한 펜션 야외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A(3)군이 물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은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수영장 안으로 혼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영장은 성인 가슴 높이로 물이 채워져 있었다. 수영장은 숙박업소 부대시설로 별도의 안전요원이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A군 부모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1일 낮 12시께 순천시 낙안면 한 사방댐 인근에서 가족과 물놀이를 하던 50대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목포해경은 물놀이철 안전 사고가 잇따르는 것을 감안,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지난해 목포에서 발생한 43건의 물놀이 안전사고 중 38%(16건)가 7~8월 집중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무더위에 탈진한 등산객이 구조되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1시 40분께 순천 조계산 장군봉 인근 향로암에서 등산로 구급약품을 교체하던 로터리클럽 회원 A(36)씨가 폭염에 등반 중 탈진, 소방헬기에 의해 구조됐다.

소방당국은 A씨를 후송, 응급처치 뒤 선암사 주차장에서 대기 중인 구급대에 인계해 병원으로 옮겼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갯벌과 갯바위 등 연안 해역을 방문할 때에는 현지 기상, 물때 등 사전 정보를 숙지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외국어로 번역한 방역수칙 홍보물 배포 지난 30일 오후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들이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에서 외국어로 번역한 방역수칙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광산구청 제공〉

"그 개가 그 개야?"

'개 물림 사망사고' 주인 영장 신청에 법원 "같은 개 증거 부족" 기각

그 개가 그 개야?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망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개를 특정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일 남양주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오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목 뒷부분을 물려 결국 숨졌다.

경찰은 이후 3개월 간의 수사를 통해 사건 현장 인근 개농장 주인인 피의자 A씨가 지난해 6월 해당 대형견을 지인에게 입양했고 이후 관리 소홀로 올해 초 목줄을 풀고 달아난 그 대형견이 5월 행인을 공격해 사망케 한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지난해 A씨에게 입양 당시 찍힌 대형견의 사진과 올해 사건 뒤 포획된 개의 외형을 분석한 전문기관의 소견 등을 제시하며 두 개가 같은 개라는 게 경찰 입장이다.

분석 결과 귀 모양, 수염의 패턴과 간격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검증에서 해당 대형견이 A씨와 A씨가 운영하는 시설에 애착을 보인 점, A씨가 지인에게 개를 넘겨받았으며 나중에 "개가 죽어서 태워버렸다고 해라"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대화 내용 등 정황 증거 등도 확보됐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A씨에 대해 과실치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최근 사건에 등장한 두 개가 같은 개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했다.

외향이 비슷하다고 똑같은 개로 단정 짓기는 성급해 구속 수사보다는 피의자에게 최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며 법정에서 다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입양했다가 달아난 그 개가 사고를 낸 개가 맞는지도 법정에서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달아나 유기견 생활을 한 개가 사망 사고를 냈을 때 이전 주인을 처벌할 수 있는 지, 개를 주인공을 한 현장 검증 등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도 관심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개가 유기견 생활을 상당 기간 한 부분에서 법리 적용을 고민했는데, 의외로 확실하다고 여겼던 개의 신원 일치 여부에 법원이 의문을 제기해 다소 당황스러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잇단 음주운전 20대…재판부 선처 이유는

"처벌 대신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사회가 도와줘야"

"어린나이에 부모를 잃고 살면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고인처럼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 대한 선고에 앞서 이렇게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한 달도 못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28㎞ 가량을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116%)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찰 조사를 피하면서 무면허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폭행과 재물손괴 등 다른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A씨는 이같은 혐의 때문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하는 것으로 선처했다. 기소된 뒤 선고일까지 4개월 가량 꼬박꼬박 재판부에 제출한 14차례의 반성문을 읽어보니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반영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의 청년이기 때문에 결단하고 실천하기에 따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무작정 강9력처벌하는 대신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줘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사회가 도와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작년 수해 구례 주민 1818명 1042억원 규모 배상 신청

지난해 8월 섬진강 범람으로 수해 피해를 입은 구례주민 1818명이 본격적으로 배상 요구를 하고 나섰다.

1일 구례군과 섬진강 수해 구례군 피해자 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구례읍사무소에서 '2020년 수해 피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1818명이 1042억원 규모의 피해 배상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례군은 민간 수해대책위와 합동으로 구례군 환경분쟁조정 신청 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왔다. 읍·면별로는 구례읍 891명, 문척면 211명, 간전면 92명, 토지면 202명, 마산면 266명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례군은 오는 2일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주민들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피해액은 심의와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해대책위 공동대표들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피청구기관 11곳을 상대로 섬진강 수해를 유발한 직무 유기 및 방임 책임을 묻고 그에 걸맞은 피해 배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5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0타경55965	1	목포시 자유로82번길 3 단층33.05㎡[현황50.52㎡ 제시외 주방등11.1㎡[공부상세멘블록조세멘기와지붕33.05㎡,현황세멘기와지붕위감판기와보강지붕50.52㎡"]	단독주택	64,726,920 64,726,92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목록1인접한토지[1296-1번지]지상건물과합병상태
		목포시 산정동 1296-2 96.4㎡	대		
[대지/임야/전답]					
2020타경6215	1	무안군 일로읍 죽산리 74-3 1021㎡	전	53,092,000 53,09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81-1 1131㎡	답	62,205,000 62,205,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0타경6291	1	무안군 현경면 동산리 185 589㎡[현황주차장등으로이용중.접도구역일부저촉]	전	14,136,000 14,136,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원상회복명령가능성있음]
2020타경56180	2	영암군 영암읍 역리 419-1 1260㎡	전	172,620,000 172,620,000	
2020타경56357	1	영암군 서호면 쌍풍리 59-8 1010㎡	답	13,130,000 13,13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0타경56425	1	영암군 시종면 만수리 산145-2 936㎡[연고지미상분묘[약8기]소재.수목포함감정가]	임야	16,812,000 16,812,000	현황묘지및자연림
2020타경56470	1	목포시 광동3가 5-1 62.8㎡[매각대상아닌 제시외건물은본건토지[5-1번지]와인접지[5-11.5-3번지]지상소재,본건토지대부분차지[감정평가서참조]]	대	38,998,800 38,998,800	현황건물[주택]부지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20타경54641	3	목포시 양을로248 3층 206호[용해동,법조빌딩] 36.76㎡	근린시설	32,000,000 32,000,000	
2020타경55057	2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82번가길49 8층 802호[뉴캐슬하이클래스] 82.58㎡	근린시설	203,000,000 203,000,000	맑소되지않고매수인에게인수되는전세권설정등기있음
[자동차,중기]					
2021타경50769	1	사용본거지:목포시 산정동 양을로128 801호[산정동,산체스오피스텔] 등록번호:45도7345 차명:E300 최초등록일:2014-6-26 검사유효기간:2019.6.26~2021.6.25.전반적관리상태보통,범퍼등에흠집있음]	자동차	18,000,000 18,000,000	보관:전남무안군일로읍지장리535번지[제3자 김형채에게보관].주행거리:151,305km
[기타]					
2020타경56067	1	영암군 군서면 해창리 산3-1 3306㎡[공유자이승현지분1/2전부.현황일부임야,일부전]	목장용지	30,911,100 30,911,1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1. 8. 17. [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1. 8. 24. [화]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잠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1. 8.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보좌관 공정배